

위험천만 '음주 항해' 급증

해경, 전남·북 해상 을 52건 적발... 단속 기준 낮아 해마다 늘어

지난 24일 오후 1시30분께 고흥군 동일면 내나로도 동쪽 3마일 해상. 여수해경은 58급 예인선 D호에게 정선 명령을 내렸다. 선장 최모(63)씨에게 음주측정기를 들이대자 혈중 알코올 농도 0.20%가 나왔다. 앞서 목포해경도 지난 22일 신안군 도초도 서방 1.5km 해상에서 17급 근해 자방어선 S호 선장 최모(42)씨를 붙잡았다. 만취상태에서 배를 운항하던 두 사람은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전남·북지의 해안에서 해상 음주 운항이 줄지않고 해마다 늘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 현재 목포·여수·군산 등 서·남해안에서 적발된 해상 음주운항건수는 52건에 달한다. 이는 2006년과 2005년 같은 기간 36건과 21건에 비해 각각 30.8%, 59.6% 증가한 수치다.

해상 음주운항이 매년 느는 것은 일부 선장과 항해사들이 관행적인 음주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 음주운항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육상(면허정지기준 0.05%)보다 관대한 것도 주된 이유다. 면허에 대한 정지나 취소 처분도 없다.

이와 유사하게 피서객들이 수상 오토바이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가 음주운전 처벌대상 인줄 모르고 술을 마신

채 운항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음주운항이 급증하자 해경은 어선을 비롯, 여객선·유도선·낚시어선·유조선·유해화학물질 운반선·동력 수상레저기구 운항자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해경은 또 입·출항 선박과 해양수산 관련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내

항포구와 해상에서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목포해양경찰 관계자는 "음주운항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인력과 경비함정 부족으로 드넓은 바다에서의 단속이 쉽지 않다"며 "음주운항의 경우 인명·재산피해와 더불어 해양 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속을 적극적으로 펼쳐 사고 예

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해상교통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배를 운항하는 것은 ▲5t 미만은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t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상휴·이종행·강성훈 기자 golee@kwangju.co.kr



목포해양경찰 소속 25t급 P-109 순찰정(정장 이순식) 직원들이 목포 북항에서 7마일(1마일=1.6km) 떨어진 외달도 앞바다에서 조업 중인 통발 어선에 올라 선장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有錢 해외' '無錢 국내'

광주 일부 고교 '분리 수학여행' 논란

광주시내 일부 고등학교가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에도, 같은 학년 학생들을 국내·외로 분리해 수학여행을 보내고 있어 논란이다.

광주 S고 1학년생 351명은 지난 9일 3박4일 일정의 수학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4곳. 중국과 일본, 수도권, 제주도 등이었다. 전체 학생 중 127명은 천진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수학여행으로 가보고 싶은 곳에 대해 설문조사했는데, 가장 선호한 곳이 이들 4곳이었다"며 "올해의 경우 형편이 어려워 국외로 가기 힘든 학생 3명에게 장학금을 쥐 수학여행을 다녀오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학부모들에게 4~5차례 동의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학생은 "해외 여행팀에 끼고 싶었는데, 가정 형편 때문에 말도 꺼내지 못해 속상했다"고 말했다. 학생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위화감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위화감 논란을 낳을 소지가 있는 국내·외 분리 수학여행을 자체해달라고 당부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중국·일본·서울·제주
4곳 나눠서 각각 출발
학생 사이 위화감 조성

놀이공원 소풍은 고교생들 쇠파이프 휘두르며 패싸움

북부경찰, 6명 조사

광주 북부경찰은 25일 놀이공원에서 패싸움을 벌인 학생 G고 3년 김모(18)군 등 4명과 전북 익산 B고 2년 이모(17)군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G고 김군 등 4명은 지난 24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 시 북구 모 놀이공원 화장실에서 담

배를 피우다가, B고 이군 등 2명이 쳐다보자 시비 끝에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패싸움을 벌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날 놀이공원에 소풍 왔다가 교사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교사들은 경찰에서 패싸움이 벌어지는 시각에 화장실 밖에 다른 학생들과 있어서 싸움을 말릴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종행 기자 golee@

면세유 불법유통

광양시의장 구속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희욱 부장판사)는 25일 4억원 상당의 면세유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수성 광양시의회의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

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장은 생활여건이 어려운 농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면세유 제도를 악용한 점과, 불구속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무등산 복원계획 절차상 문제 없다"

광주고법 판결

광주시의 무등산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특별1부(부장판사 김상철)는 25일 무등산 인근 주민 9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무등산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결정고시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일대 주민 181명은 2001년 12월 고시한 무등산 공원계획 변경결정이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주민 181명이 제기한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했으며 이 가운데 9명이 제기

한 항소심에 대해서도 기각 판결을 내려 광주시는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농산물 절도 50대 4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강신중)는 25일 농산물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5월5일 새벽 1시19분께 광주시 북구 각화동 농산물 공판장에서 마른 고추 120kg을 훔치는 등 지난 7월 중순까지 6차례에 걸쳐 농산물 공판장을 돌며 고추 261kg(시가 3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장흥군청 '안내관' 비리

공무원 13명 적발, 둘 구속

광주지검 장흥지청

문화재 안내관 설치와 관련 군청 예산을 횡령하고 업자에게 돈을 받은 공무원들이 추가로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25일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군청 예산 등을 가로챈 장흥군청 공무원 변모(46·6급)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방모(35·7급)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사안이 경미한 공무원 11명에 대해서는 장흥군청에 자체 징계토록 통보하고 공무원들과 짜고 공사를 한 것처럼 꾸민 광고업자 문도

(62)씨를 뇌물공여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와 방씨는 2005년 9월~2006년 12월까지 플래카드 설치 공사 등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했으며, 문씨와 방씨에 허위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각각 710여만원과 350만원의 군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8일 문씨에게 공사 편의 대가로 600여만원을 받고, 허위 준공감독 서류를 작성해준 혐의로 장흥군청 공무원 김모(39·건축 7급)씨를 구속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나원침 (7341) 김장두



다들 권하하심재 KCC

DS건설(주) KCC-청도, 연소, 도매, 대우

KCC청도, 시스템청도 생산·시공

▶ 010-522914-3001 ▶ 010-522914-3002

(주)본드나리 KCC-신리, 대우, 대우

실리, 방수, 철학, 타이브

▶ 010-522914-3001 ▶ 010-522914-3002

컬라면에 지렁이... 위자료 300만원

○...법원이 '라면에 든 지렁이' 때문에 우울증을 겪었다면 판매업자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박정재 판사)는 조모씨와 조카 이모양이 컵라면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치료비 68만여원과 위자료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컵라면에 든 지렁이는 누구에게나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판시.

○...조씨 등은 지난 8월 컵라면을 먹던 중 지렁이를 발견한 뒤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다고 제조사를 상대로 각각 2천5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 /연합뉴스